

## ‘광주형 일자리’ 타결 임박 … 노동의 새 지평 열리나

광주시-현대차, 이번주 투자협약체결 유력 … 오늘 일정 나올 듯  
타결 시 타지역에도 유사한 모델 … 정부 일자리 창출 긍정 영향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6개월 넘게 끌어온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긴 2019년 예산의 이번주내 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이병훈 광주 경제문화부시장 등 광주시 협상단과 현대차는 마지막 세부 조항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상이 끝나면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결의와 노사상생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투자협약체결식까지 이번주에 일사천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투자협약체결식에는 현대차 고위관계자,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 고위관계자 등도 참석한다.

이용선 광주시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에 (광주형 일자리를) 타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4일이면 협약과 관련한 대강의 일정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왔던 이 시장의 이 같은 언급은 난항을 겪었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막바지에 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회가 예산 처리 시한을 넘긴 상태지만, 야당은 7일 국

회 본회의를 열어 ‘광주형 일자리 예산’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정부에 요청한 예산은 전입도로 건설비 등 2912억원이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광주시가 고임금의 대기업 노동자 임금을 낮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고안한 뒤 4년 여만에 실제 모델이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투자협약이 체결되면 추가 투자 유치, 합작법인 설립, 빛그린산단지 내 착공식 등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이 모델을 군산, 거제 등 쇠락한 지역에 적용해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삼을 방침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빛그린산단 내 62만 8000㎡ 부지에 자회사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투입, 연간 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SUV 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다.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 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3일 오후 제2순환도로 제1구간 요금소에서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맥쿼리는 현금 1220억원 쟁겼지만 광주시에 남은 건 불확실한 미래 뿐

‘의혹 투성이’ 민선 6기 광주시-맥쿼리 제2순환도로 변경 협약

### <2> 협약 변경 무엇을 담았나

민선 6기에서 추진한 협약 변경으로 광주시는 모두 1014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14억원에는 공사가 끝난 하이패스 설치비 27억원이 포함돼 있으며, 합의금 형태의 369억원은 제외돼 있다. 법인세 부담도 논란이다. 업체가 내야 할 세금을 시가 떠안았지만, 시는 이를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받아들였다. 절감 규모를 1000억원 내외로 하기 위해 각종 ‘장치’를 한 흔적이 변경협약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화·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운영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 재정 지원)의 보장기준통행료 수입, 즉 협약 변경 전 광주시의 부담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감 규모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높게 책정하면 표면상 재정절감 규모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광주시는 물가상승률을 하한 1.31%, 상한 2.0%로 규정해 절감 규모를 부풀리지 않고, 운영비를 100%만 지급하기로 해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하고 있다. ‘액상’ 규모를 1000억원 내외로 하기 위해 각종 ‘장치’를 한 흔적이 변경협약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맥쿼리가 자회사 (주) 광주순환도로투자에 차입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겨가는 기준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미래 절감 규모가 불투명하게 협약을 변경하면서, 미지급금 851억 원, 합의금 형태의 369억원 등 모두 1220억원을 내야할 형편이다. 맥쿼리는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 가치를 선점하고, 광주시는 2028년에서야 확인할 수 있는 1000억원 내외를 절감한 셈이다.

맥쿼리가 최근 공개한 투자법인 운영성

과에서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순이익이 지난 2016년 341억600만원에서 2017년 388억2700만원으로 오히려 상승했다.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맥쿼리와 협상에 들어갔으며, 맥쿼리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조건 조정 계획을 제출하자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회계검토 자문용역을 발주하고 6개월간 전문가, 공직자 등이 참여하는 재정절감대책단 회의를 7차례 가졌다. 2016년 6월 24일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이에 대해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기획재정부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광주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2016년 12월 16일 변경실태협약을 체결했다.

과정만 놓고 보면 절차적 정당성은 충족시켰다는 평가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다. 협상 변경에 따라 우선 광주시는 MRG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2016년부터 2028년까지 재정지원금이 3699억원에서 2685억원으로 감소, 13년간 1014억원을 낮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가 재조사한 절감규모는 1018억여원이었다. MRG 방식의 재정지원금은 물가상승률 2.0%로 고정해놓고, 통행량이 연간 약 2%씩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다. 대안적 투자비보전 방식(MCC) 방식에서는 운영비를 물가상승률 1.31%, 최저임금인상을 평균 4.5%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서식에 따라 MRG 방식 재정지원금에서 대안적 MCC 방식 재정지원금을 제하면 11년간 1018억여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당시 발표한 13년간 절감 액수와 2018년 재조사한 11년간의 절감 액수가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2016년 작성한 재정경감방안 연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1.3%일 경우 절감액은 1031억원이며, 법인세를 낮추면 505억원이다. 3.0%라고 가정하면 2010억원(법인세 인하 감인 1799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안적 MCC 방식에 의해 맥쿼리의 신규투자금을 자본금 330억5000만원은 물론 선순위차입금 1350억원(이자율 9.8%), 후순위 차입금 661억원(14.7%) 등을 투자금으로 인정해 2341억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통행료 수입에서 수익률 9.8%를 보장하고, 원금은 매년 상각해 2028년까지 già 아니기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맥쿼리에 지급하는 금액이 항후 1014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 자본구조를 바꾸고, 각종 명목의 금액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MRG로 했다면 자원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지만 협약 변경으로 점차 줄어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사법 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 현정 사상 첫 사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현정 사상 처음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5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

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며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화·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라남도 JeollaNamdo

# 친환경쇼핑 남도장터



검색창에 남도장터 ▶

남도장터

검색

www.jnmall.kr

‘남도장터’는 전남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한곳에서  
살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Mall  
남도장터